

美의회 반격...“홍콩주민 난민 받는다” 초당적 법안 발의

보안법 발효에 홍콩 피란처법 추진...루비오·메넨데스 주도
대만은 홍콩인 이주 돕는 대만홍콩서비스 교류관공실 개소

정치적 탄압이 우려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대만은 홍콩인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 교류관공실'을 개소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공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홍콩 피란처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할 토대로 우려를 사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발효하자 몇시간 만에 나온 대책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 하원의원, 호

아킨 카스트로(민주당·텍사스) 하원의원 등이 입법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 법안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정치 행사에 평화롭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박해를 받을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홍콩주민들에게 미국 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박해 위협에 놓인 주민들은 홍콩이나 제3국에서 서류작업을 통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수용되는 홍콩 주민은 미국의 현행 난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며, 법률의 유효기간은 가결 후 5년으로 설정됐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미국은 홍콩주민들이 홍콩에서 그

들의 사회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동선언(중영 홍콩반환협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박해에 직면했을 때 피신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우리가 홍콩주민들을 단호하게 지지한다는 점, 그들이 권리 주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달아나더라도 미국 이민 체계의 결합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겠다는 점을 중국 공산당에 강조하려고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도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들의 이주를 적극 돕겠다고 나섰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난 30일 페이스북 계정에 7월 1일부터 홍콩인의 이주를 돕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서비스교류관공실'이 문을 연다고 예고하면서 "대만은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함께 협력해 홍콩 인민에게 최고로 굳건한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타이베이에 이날 문을 연 대만홍콩서비스 교류관공실은 대만에 이주하고자 하는 홍콩인들에게 취학, 취업, 이민, 투자 등 문제와 관련해 원스톱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대만 정부가 이 조직을 만든 주된 목적은 정치적 이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홍콩의 민주 진영 인사와 시위 참여자들의 대만 이주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미 작년부터 적지 않은 홍콩 민주 진영 인사들이 대만행을 선택했다. 홍콩에서 중국이 지정한 금서를 팔던 코즈웨이베이 서점을 운영하다가 중국 본토로 끌려가 강제 구금됐던 람왕키씨도 작년 대만으로 '망명'을 했다. 정치적 망명이 아니라도 평범한 홍콩인의 대만 이민은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에만 대만으로 이주한 홍콩 시민은 5858명으로 2018년 4148명보다 41.1% 급증했다. /연합뉴스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오른쪽에서 3번째)이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인 1일 열린 국기 게양식에서 연설을 마친 뒤 테레사 첩 법무장관(가운데) 등 참석자와 함께 건배하고 있다. 논란이 큰 홍콩 국가보안법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미국 GPS 위성 실은 스페이스X 로켓 발사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미국 우주군(USSF)의 GPS(위치 확인 시스템) 위성을 탑재한 스페이스X의 팰콘9 로켓이 발사대를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보안법 최고형량 '종신형'...외부세력 결탁 엄벌

반중 시위대와 홍콩 민주인사를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영 신화 통신이 1일 공개한 홍콩보안법 전문에 따르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과 비교해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모든 범죄 행위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규정함으로써 홍콩 독립 세력의 손발을 확실히 묶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반영하듯 총 6장으로 구성된 홍콩보안법에서 범죄행위와 처벌 조항을 담은 3장이 가장 길이가 길었다. 중대범죄 외에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홍콩보안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행위에는 국가 기구 훼손 및 파괴, 기간 시설 파괴, 교통 시설 훼손 등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시위 방식과 관계된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 조슈아 왕과 지미 라이 등 민주인사의 처벌과 직결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베이징 소식통은 "법률의 구성과 내용을 보면 홍콩 시위대를 겨냥한 내용이 총총히 짙어 있다"면서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앞으로 홍콩 시위의 형식과 규모 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세력 넓히는 페이스북 광고중단 운동

폴크스바겐·화이자·포드·SAP 동참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광고를 끊자는 운동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익을 위한 중도를 멈춰라'(#StopHateForProfit) 운동에 완성차 업체 폴크스바겐과 제약사 화이자, 커피 체인점 블루보틀 커피, 소프트웨어 업체 SAP 등이 동참했다고 보도했다. 화이자 7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그 회사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광고를 없애기로 했다며 "오늘 우리는 페이스북이 자사 플랫폼들이 모든 이에게 안전하고 믿을 만한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

다"고 밝혔다. 또 블루보틀과 SAP, 폴크스바겐도 비슷한 이유를 들며 7월 한 달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유료 광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완성차 업체 포드, 스포츠 의류업체 아디다스, 리복, 푸마, 전자제품 유통점 베스트바이, 소독·위생용품 업체 클로록스, PC·프린터 제조사 HP 등이 동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운동에 동참한 기업·기관은 240여개로 늘어났다. 페이스북은 지난 30일 극우 극단주의 운동 '부갈루'(Boogaloo)와 연루된 계정과 그룹, 페이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로 여성 일자리 더 타격"

ILO "노동시장 성평등 무너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봉쇄령이 장기화하면서 남성보다 여성의 일자리가 좀 더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음식·숙박·소매·부동산개발 등에 종사하는 여성 중 40%(약 5억1000만 명), 남성은 36.6%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 남녀간 불균형적인 실직 형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로이더통신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LO는 각종 봉쇄령으로 인해 심각한 보건·복지 분야 여성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까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져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LO는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의 성평등 분야에서 이뤄낸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필리핀, 코로나19 핫스팟 된 세부시 봉쇄령 연장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핫스팟이 된 필리핀 중부 세부시에 대한 봉쇄령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일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세부시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격리'(ECQ) 조치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CQ는 현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하는 가장 강력한 봉쇄령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의 외출을 금지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의 '일반 사회적 격리'(GCQ) 조치도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운행과 식당 등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엄격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30일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80명 가운데 468명은 세부시가 있는 센트럴 비사야 지역에서 나왔고, 203명은 마닐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필리핀에서는 당국이 경제 회생을 이루

로 마닐라 등 위험 지역의 방역 수위를 ECQ에서 GCQ로 더 낮은 지난달 1일을 전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졌다. 이 때문에 지난달 1일 1만8638명이던 누적 확진자는 한 달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난 3만7514명으로 집계됐다. 필리핀대의 한 연구팀은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되면 필리핀의 코로나19 누적 환자가 7월 말 6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